


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1월 24일(월)
담당	이재민(페이지	5 page
제목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개인예산제 공약 규탄 캠페인		

장애인개인예산제 불장난 NO! 장애인권리예산보장 YES! 캠페인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 정책 불장난을 멈춰라!”

- 일시: 2022.01.25.(화). 15시
- 장소: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권달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법정·비법정 전국적인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90여 개의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 단체회원과 장애인·비장애인 개인회원(장비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함께 활동하는 상설연대체입니다.
3. 지난 1월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이하 윤 후보)는 장애인 정책 공약으로 ① 시외·고속·광역버스에 저상버스 투입, 장애인 콜택시도 확대 ② 주어진 액수 안에서 장애인 스스로 복지 서비스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③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④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강화 ⑤ 발달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를 “장애인과 함께하는 윤석열의 다섯 가지 약속”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전장연은 **성명 발표**를 통해 장애인들의 일상을 단편적이고 시혜적으로 바라보며 장애계가 지금까지 요구해왔던 바들은 **패싱(passing)**하는 공약임을, 그리고 그마저도 “무엇을”만 있고 “어떻게”는 없는 발표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5. 문재인 정부가 국민명령 1호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약속하고, 부양의 무제 폐지와 탈시설 로드맵 등 장애인 관련 정책들을 대거 추진했지만 장애인의 권리보장정책이 번번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좌초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장애인권리예산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어떻게 확보하여 공약을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6. 특히 윤 후보가 발표한 ‘개인예산제’ 공약은 **장애인권리예산의 규모 자체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유명무실한 공약입니다. 예산의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필요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 구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은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7.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 영역을 대상으로 일정한 사정 절차를 거쳐서 총량이 금액으로 산출되면 장애인 개인이 ‘서비스 간 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 예산에서 서비스 종류와 양의 확대, 그리고 예산의 확대 없이 총량에 가둬진 ‘서비스 간 자기주도 조정’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허황된 발상입니다. 지금 장애인정책에 필요한 것은 서비스 종류와 양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별 자기주도 사정’입니다.
8. 전장연이 혜화역 승강장에서 출근선전전을 시작한 지 어느덧 36일째입니다. “대한민국은 기획재정부의 나라가 아니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는 선전전의 주요 의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혜화역 출근 선전전에 조금만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개인예산제’ 같은 터무니 없는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 자유권적인 기본권인 이동권마저 기획재정부 반대에 「교통약자 및 이동편의 증진법」의 원안 개정이 불발했습니다.
9. 이에 전장연이 **개인예산제의 허구성과 권리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윤 후보에게 알리러 직접 국민의 힘 당사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장애인개인예산제 불량난 NO! 장애인권리예산보장 YES! 캠페인**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 정책 불량난을 멈춰라!” 에 뜨거운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1] 기자회견 포스터



[붙임 2] 기자회견 순서 안내

장애인개인예산제 불장난 NO! 장애인권리예산보장 YES! 캠페인 “윤석열 후보는 장애인 정책 불장난을 멈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2년 1월 25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여는발언	이형숙 (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	투쟁발언	이진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대문지회장)
3	투쟁발언	김도현 (노들장애인야학·노들장애학궁리소 상임활동가)
4	닫는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자의 장애인정책 공약은 “깡통 다섯 개 선물 세트”다.

- 윤 후보는 장애인권리를 주어진 예산으로 가두지 말고
책임 있는 예산으로 보장하라!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이하 윤 후보)는 지난 1월 19일, 장애인정책 공약으로 ① 시외·고속·광역버스에 저상버스 투입, 장애인 콜택시도 확대 ② 주어진 액수 안에서 장애인 스스로 복지 서비스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③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④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강화 ⑤ 발달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를 발표했다. 윤 후보는 “장애인과 함께 하는 윤석열의 다섯 가지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정책 공약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과 함께 하기는커녕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시혜적 장애인정책에 대한 성찰도 없고, 예산의 구체성도 없는, “윤석열의 깡통 다섯 개 선물세트”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장애인정책은 장애등급제와 장애인거주시설로 대표되는, 시혜와 동정으로 치장된 떡고물이었다. 개인의 욕구와 관계 없이 장애등급에 따라 주는대로 받아먹어야 했고, 선택권이라고는 감옥같은 거주시설에 살지, 집구석에 처박혀 갇혀 지낼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돈 한 톨이 아깝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1842일 광화문역 농성투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탈시설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산을 담보하지 못 한 채, 사실상 공약을 파기하고 말았다. 공약 파기 주범은 기획재정부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도 대통령도 아닌 기획재정부였던 것이다. 그 어떤 정책도 결국 기획재정부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면, 모양만 다른 깡통일 뿐이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도입된 “서비스지원종합조사”는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기획재정부가 정해둔 실링(ceiling) 예산까지로 잘라버린 대표적인 병폐다. 정부는 최중증장애인의 24시간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필요성을 제도 내에 담지 않고 하루 최고 16시간까지만 보장한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조작된 점수표에 의해 서비스 급여량이 판정되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서비스 필요도가 충분히 반영될 리가 없다. 윤 후보가 들고 나온 “개인예산제”라는 것도 다양한 서비스가 없고, 급여량 판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주도성도 없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서비스 간 칸막이를 허물어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매우 허구적인 발상이다. 가령 식당을 갔는데 메뉴판에 공기밥과 김치만 있다면 선택권을 보장해준다고 해봤자 다른 반찬은 못 먹는 상황인 것이다. 윤 후보가 개인예산제로 선택 가능한 서비스 예시로 나열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구입, 재활서비스 이용, 교육비용, 교통비용 등에 대해서, 이 중에 필요한 것을 골라담게 해주는 것 보다, 당사자의 필요와 권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쌓아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인 노동 정책 역시 중증장애인 노동의 기준에 맞추어진 일자리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직업훈련 위주의 정책을 해봤자, 고용률은 제자리 걸음일 뿐이다. 특히 장애정도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전체 장애 62.7%, 경증 장애 56.7%, 중증 장애 78.2% 라는 점을 볼 때, 기업의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최중증장애인의 기준에 맞추어진, 최중증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일자리를 늘려야 하지만, 윤 후보의 공약 내용에서 최중증장애인의 고용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차량 도입대수를 늘려도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책임을 통해 운행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어렵다. 이처럼 윤 후보의 장애인정책은 현재 장애인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향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 실효성 없는 정책에 머무를 것이 뻔하다.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는 예산의 책임 있는 반영 없이 불가능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책임 촉구!”라는 외침으로 매일 아침 8시 혜화역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 중이며, 오늘로 35일차를 맞이한다. 윤 후보를 비롯한 모든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고한다. 장애인권리를 주어진 예산으로 가두지 말고 기초적 권리를 보장할 최소한의 예산 책임부터 전제하고 장애인 정책을 논하길 촉구한다.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장애인복지가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이다.”라는 말만 팔아먹지 말고, 진정으로 국격을 올릴만한 진정성 있는 장애인정책 공약을 들고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책임 촉구” 출근 선전전이 이루어지는 아침 8시 혜화역으로 찾아오길 바란다.

2022. 1. 2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